

북한 경제의 재구성 - part II 『근로자』와 『경제연구』 등 북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박후건(경남대학교)

북한이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북한 경제를 이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다. 북한은 정량적(quantitative)인 자료를 발표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나 『경제연구』 등과 같은 경제 전문지에서 자신들이 시기마다 처해 있는 경제 실상과 이것에 대처하는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정성적(qualitative)인 자료들을 분석하여 북한 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재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은 두 개의 연결되는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자립적 경제 기반을 구축하려 하였던 북한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1986년 전면적 개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연합기업소체제를 구축한다. 첫 번째 논문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연합기업소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1986년까지 『근로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때까지 형성된 북한 경제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으며 두 번째 논문은 1987년부터 출간된 『경제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합기업소체제가 북한에서 정착되는 과정, 소련의 몰락으로 시작된 전례 없는 경제위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 그리고 1990년대 말 실리와 선군이 동시에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7·1 조치’ 그리고 ‘선군정치’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 이 연구 결과물은 2014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장려금 지원에 의한 것이다.

주제어: 경제연구, 연합기업소체제, 도급제, 분권화, 혁명적 경제전략, 실리, 7·1 조치, 선군정치

1. 들어가면서

이 글은 『현대북한연구』 2013년 16권 3호에 실린 “북한경제의 재구성 - part I”의 2편에 해당하는 논문이다. 이 논문은 1987년부터 출간된 『경제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합기업소체제가 북한에서 정착되는 과정, 소련의 몰락으로 시작된 전례 없는 경제위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 그리고 1990년대 말 실리와 선군이 동시에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2002년 나온 ‘7·1조치’ 그리고 ‘선군정치’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2. 연합기업소체제

1) 연합기업소체제의 전면적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trail and error)

북한은 1987년부터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을 시작하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계속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물질적·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 것이 제3차 7개년 계획의 기본과업이었는데 기본적으로 공업생산은 1.9배, 농업생산은 1.4배 이상으로 장성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 전망목표’

를 계획 기간 안에 성취하는 것이었다.¹⁾ 김일성은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²⁾고 강조하였는데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의 결정적인 개선’은 바로 연합기업소체제의 전면적인 도입과 실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통제적·지시적 계획체제에서 연합기업소체제로의 이행은 북한 지도부의 기대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중앙집권적 통제적·지시적 계획경제 체제에서 근로자들은 물질적 동기보다는 정치적·도덕적 동기에 길들여 있었다. 맡은 일을 시간적으로 채우기만 하면 직장에서 봉급은 연금과 같이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 능률을 올릴 동기는 별로 없었다. 그러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연합기업소체제는 국가납부 의무를 수행한 다음 이익금을 연합기업소적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번 단위가 적게 번 단위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도급제(都給制)체제이었다. 도급제는 공장·기업소 단위뿐 아니라, 매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어, 근로자들에게 물질적 동기가 부여되었다.³⁾ 그러나 계획체제의 오랜 습관에 젖어 있는 근로자들에게 물질적 동기가 부여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갑자기 경제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호모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도급제 체제가 원만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제계산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즉 종업원 한 사람당 생산량, 제품 단위당 물자소비량을

-
- 1) 김재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는 것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과업,” 『근로자』, 제2호(1987), 79쪽.
 - 2) 김일성,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19쪽.
 - 3) 리상설, “대안의 사업체계 관철과 연합기업소,” 『근로자』, 제7호(1986), 50쪽.

비롯하여 생산 규모, 노동생산능률, 설비와 원자재의 이용 상태를 반영하는 통계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하는데, 아직 공장당위원회의 당위원장을 비롯한 당 간부도, 지배인도, 기사장도 새로운 체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당위원회의 준비 상태가 이 정도이니 종업원들의 준비 상태는 거론할 필요도 없이 미비하였을 것이다.

공장·기업소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원료, 자재, 연료, 동력 등을 낭비하는 현상은 근절되고 있지 않았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천리마식 대중 동원을 통한 경제 건설과 독립채산제 단위가 아닌 예산제 단위로 운영되었던 공장·기업소에서 자원 낭비와 남용은 마치 습관처럼 일상화되어 있었으며 공장·기업소는 낭비에 대해 물질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⁴⁾ 또한 연합기업소는 국가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 계획화사업, 생산조직사업을 비롯한 모든 경영 활동을 자체로 해나가는 계획 단위, 생산 단위, 집행 단위가 되었지만 여기에 대해 대부분의 연합기업소들은 자신들의 권한의 범위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가격 공간의 이용, 즉 가격 책정 부분은 대부분의 연합기업소에 매우 생소한 것이었다.

연합기업소의 생산물이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의미가 크고 연합기업소들 사이에 유통되는 제품인 경우 국가에서 가격을 정해주지만, 연합기업소에서 생산하고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제품인 경우⁶⁾에는 기

4) 한득보, “원료, 자재의 합리적 리용에 작용하는 중요지표들과 경제적 공간,” 『경제연구』, 제1호(1987), 40쪽.

5) 유시영, “연합기업소는 우리 식의 새로운 기업소조직형태,” 『경제연구』, 제1호(1987), 28~29쪽.

6) 연합기업소의 형태적 기준으로 보아 연합기업소 대부분의 생산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업소 스스로 정하거나 협상과 계약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⁷⁾ 그러나 대부분의 연합기업소들은 국가가 가격을 정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가격보다는 현물을 위주로 거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 공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또한 계약은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기⁸⁾ 때문에 이들은 계약 방식에 의한 자제 수·공급을 해결하기보다는 위로부 터의 지시를 기다렸다.

연합기업소체제는 결국 이전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제도(institution)를 바꾸는 일이다. 관행, 습관, 그리고 문화가 바탕인 제도를 바꾸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일이다. 최원철은 연합기업소체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연합기업소 도입이 갖는 이점과 이전 체제의 단점을 다음과 같이 원론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사회적 분업체계에 망라되어있는 기업소들은 같은 제품이나 생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원료의 보장조건, 기계설비의 기술상태, 로력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생산하는 제품이나 생산물이 같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매 기업소들이 국가에 리익을 줄 정도를 바로 평가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이것은 가치공간들을 리용하는 독립채산제적 기업관리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 문제는 경영단위들의 생산활동을 옳게 평가하는 요구로 된다. 사실상 경영단위의 생산활동, 국가계획과제 수행정형을 바로 평가하지 못하는 독립채산제

7) 리동구, “가격의 일원화와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2호(1988), 32쪽.

8) 최영옥, “계약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제2호(1988), 41쪽.

는 아무런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⁹⁾

완곡하게 표현된 최원철의 주장의 요지는 연합기업소 차원에서 독립채산제가 잘 관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하 공장·기업소들에서도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니, 경영 평가를 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합기업소체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자재 수·공급은 등가보상의 원칙에서 매매(賣買)가 이루어지는 ‘상업적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잘 지켜지지 못하고, “기업소들 사이에 생산수단을 넘겨주거나 넘겨받을 때 망탕 거저 주거나 녹거리로 주는” 형태가 만연하였다. 현명한은 이러한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소들 사이에 주고받는 물자재산운동의 상업적 형태를 옹계 실현하며 무현금 결제 조직을 개선하여야 한다¹⁰⁾고 주장하였는데 그의 글에서 눈에 띄는 점은 자재 수·공급체계에서 사고파는 형식 즉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기업소들 사이에 주고받는 물자재산운동의 상업적 형태를 옹계 실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국영기업소들 사이에 주고받는 생산수단은 팔고 사는데서 상업적 형태를 취한다. 그러므로 기업소들 사이에 생산수단을 넘겨주거나 넘겨받을 때 망탕 거저 주거나 녹거리로 주는 것이 아니라 등가보상의 원칙에서 팔고 사는 형태로 주고받아야 한다.¹¹⁾

9) 최원철,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고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 것은 기업관리개선의 기본담보,” 『경제연구』, 제4호(1989), 9~10쪽.

10) 현명한, “류동자금의 리용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4호(1989), 33쪽.

11) 현명한, 위의 글, 33쪽.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 차원에서는 연합기업소체제에 어느 정도 적응해 가고 있었지만 아직 현장 근로자들에게는 경제 공간이라는 영역으로의 이동과 안착은 기업보다 더디었다. 공장·기업소에서는 원가, 가격, 그리고 수익성이라는 경제적 공간이 이용되고 경제계산도 도입하여, 노동력, 기술, 원료, 자금 등의 계획화의 주요 요소들을 타산하는 등 연합기업소체제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종업원들에게는 잘 실행되고 있지 않았다. 많은 공장·기업소들에서는 아직도 평균주의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고¹²⁾ 있어서 종업원들 사이에는 태업이 만연하고 심지어는 일을 하지 않고 생활비를 받아가는 일도 적지 않게 있었다.¹³⁾ 이러한 현상이 빨리 없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북한의 체제적 특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연합기업소체제가 도입되기 이전 북한은 모든 것을 사상에 우위를 두고 조직화를 통해 풀어가려 하였다. 사상에 우위를 둔 조직화란 결국 인간관계를 통해 일을 추진하고 처리한다는 것이다.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모두 사상에 우위를 두고 조직화를 통해 대중을 동원하여 거시적으로 경제를 건설하고 미시적으로 공장·기업소를 이끌어가는 것이었다. 여기서 인간관계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였던 기제(mechanism)와 같은 역할을 하였으며, 보다 높은 단계의 조직화가 진행될수록 인간관계는 조직화의 틀에서

12) 김재현, “도시경영부문에서 점수제에 의한 생활비분배방법,” 『경제연구』, 제1호(1990), 31~32쪽.

13) 서승환은 생활비 분배에 대한 논문을 김재현에 이어 내면서 이렇게 질타하고 있다. “...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비적 권리가 허용되지 않으며 사회를 위한 일을 한 사람에 한하여서만 소비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사회주의적 원칙이며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다”[서승환, “사회주의적 로동보수제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로동활동을 추동하는 중요공간,” 『경제연구』, 제2호(1990), 15~16쪽].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인간관계가 강화된다는 의미는 강한 동질성과 유대감을 구성원들이 서로 공유하는 것이었으며, 사상에 우위를 두었다는 의미는 이러한 조직화에서 강조되었던 것이 자기보다 조직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집단주의였다. 대중 동원 사업에서 북한사람들에게 강요되었던 것은 위와 같이 사상에 우위를 둔 조직화였고 조직화 과정에서 (그리고 그것이 길어지면서) 북한사람들은 이것을 자의반타의반(自意半他意半)으로 내재화(內在化, internalization)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일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주의원칙대로 분배에도 차등을 두겠다는 방침은 신속히 관철되기 어려운 것이었다.¹⁴⁾

2) 연합기업소체제의 공고화와 지방으로의 경제 분권화

연합기업소 그리고 산하 공장·기업소에서는 새로운 체제가 신속히 관철되지 못했지만,¹⁵⁾ 연합기업소 이외의 공간에서는 새로운 체제가

14) 박재영은 물질적 자극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부 부문 또는 모든 부문의 노동보수 기준액을 높이거나 그 밖에 물질적 자극 공간들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며 사회주의원칙에 의한 분배 조치의 강화·확대 실시를 촉구하였다[박재영, “물질적 자극문제 해결의 원칙적 요구와 기본고리에 대한 주체적 해명,” 『경제연구』, 제2호(1990), 26~28쪽].

15) 연합기업소체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실행된 지 6년이 넘었지만, 아직 많은 기업소에서 2중 독립채산제가 잘 실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안현진의 다음 글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합기업소가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은을 내개 하자면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생산기술적 구조에서의 자립성이 높아진 조건에 맞게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고 통일적이고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와 자재공급체계, 후방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2중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할 수 있는 방도들을 깊이 연구하고 받아들이며 부단히 완성해나가야 한다”[안현진, “연합기업소의

도입되기 이전부터 시장은 사람들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지방에서의 소비재 생산은 지방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자급자족적 체계였고 이전부터 계획의 통제 밖에 있었으며 시장이 수요와 공급을 매개해주었다.¹⁶⁾ 공장·기업소들의 자율권이 높아지면서 생산기업소들이 부산물이나 폐설물, 지방의 유희 자재를 이용하여 생활필수품직장, 가내작업반, 부업반 등을 꾸려 거기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소비품을 직매점과 같은 유통망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직접 판매하였다. 직매점과 같은 유통망을 통하여 판매되는 소비품은 계획 외에 생산된 것으로 생산자와 수요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가격이 제정되었다.¹⁷⁾ 여기서 말하는 유통망이란 시장을 가리키며 시장은 비록 새로

생산기술적 구조와 생산정상화,” 『경제연구』, 제2호(1992), 30쪽].

16) 이것은 리동구의 설명에서 잘 나와 있다.

“아직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에서는 서로 다른 국영경리와 협동경리가 있으며 협동농민들의 개인부업경리도 있다. 이러한 소유형태에서의 차이는 가격제정에서 한 가지 방법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게 한다…(중략)… 이러한 조건에서 자유수매식료품과 농부업생산물에 대해서는 지방의 실정에 맞게 가격을 정하도록 하여야한다…(중략)… 오늘 우리나라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는 생활필수품직장과 가내작업반, 부업반 등이 훌륭히 꾸려져 있으며 거기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소비품들은 직매점과 같은 유통망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직접 판매되고 있다…(중략)… 직매점과 같은 유통망을 통하여 판매되는 소비품에 대한 가격은 생산자와 수요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제정되는 가격이다. 직매점가격을 올바로 정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매점가격제정대상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직매점가격제정대상은 공장, 기업소의 생활필수품직장이나, 가내작업반, 부업반들에서 부산물과 폐설물, 지방의 유희자재를 리용하여 계획 외에 생산한 소비품이다”[리동구, “가격의 일원화와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2호(1988), 30~33쪽].

17) 김원국은 이 점을 보다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상업기업소와 개별적 주민 사이의 상품거래는 자유매매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만큼 주민들의 수요와 상품의 판매를 세부적으로까지 서로 맞물리기는 힘들다. …(중략)… 소매상업기업소의 상품유통계획수행정형이 주민들의 수요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소매상업기업소들의 경영활동결과가 어느 정도 자연발생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상업기업소독립

도입된 연합기업소체제의 핵심으로 신속하게 자리 잡지는 못했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공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며 새로운 체제 도입으로 탄력을 받아 확산되어가고 있었다.¹⁸⁾

고재환은 “상품보장사업에서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은 근로자들이 늘어나는 화폐소득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언제 어디서나 구매됨이 없이 상품을 사며 봉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근로자들이 로동의 질과 양에 따라 지불받은 화폐소득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요구대로 살 수 있게 한다는 것¹⁹⁾”이라고 하였는데 당시 북한에서 시장 확대의 정도와 북한 지도부의 시장 확대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고재환의 논문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또 다른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앞의 글에서 지적되었듯이 근로자(소비자)

채산제를 실시하는 데서는 반드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김원국, “사회주의상업기업소 독립채산제의 특성,” 『경제연구』, 제1호(1990), 33~34쪽].

18) 여기에 대해서 위순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주의분배법칙이 작용하는 것만큼 소비품공급사업에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분배원칙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본질상 로동에 의한 분배이다. … (중략) … 사회성원들 각자가 사회에 지출한 로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은 분배몫이 골고루 차례지도록 하는 원칙, 수요에 맞게 공급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 (중략) …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에 의한 분배는 주로 화폐형태로 실시되고 거의 모든 소비품이 상품으로 생산된다. 이런 조건에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최종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매매의 형식, 즉 상업적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위순형, “사회주의 상업발전의 합법칙성,” 『경제연구』, 제2호(1989), 42~43쪽]. 즉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은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순형 주장의 요지이다.

19) 고재환, “화폐유통을 공고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 『경제연구』, 제1호(1991), 43쪽.

들이 갖고 있는 현금의 양과 근로자들이 그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즉 시중에 풀려 있는 화폐가 시중(시장)에서 살 수 있는 상품보다 많다는 이야기이며 고재환은 상품생산을 신속히 늘려 시중에 풀려 있는 현금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당시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고재환은 이를 위해 생산을 빨리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소간에는 무현금 결제를 강화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의 원천 중 하나를 사전에 차단하고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그는 통일적인 외화관리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외화를 당과 국가의 의도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외화관리에서 부정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관·기업소들이 번 외화를 무역은행에 집중시키고 국가의 승인하에서만 쓰도록 하며 국가의 통제 밖에서 외화거래를 하거나 외화를 쓰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국내에서 외화를 유통시키거나, 기관·기업소들 사이에 외화를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통제하는 것은 국가가 나라의 화폐유통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계획적으로 그 유통량을 통제함으로써 화폐유통의 공고화를 확고히 담보할 수 있다²⁰⁾고 주장하였다.

고재환의 글을 뒤집어서 해석해보면, 당시 국가의 통제 밖에서 외화거래가 이루어지는 행위가 성행하였고, 기관·기업소들 사이에서도 외화를 거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고재환은 1991년 초반기에 위의 글을 작성하였으며 당시 북한은 소련의 몰락과 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라는 심각한 경제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원래 연합기업소

20) 고재환, 위의 글, 45쪽.

체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당시 연합기업소는 무역성을 통해서만 외국과 무역을 할 수 있었지만,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자 연합기업소에서도 직접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기업소가 어느 정도까지 무역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연합기업소까지 무역을 하고 외화가 이미 통제 영역을 벗어나 유통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연합기업소에 무역에 관한 상당 정도의 자율권이 부여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²¹⁾

전국적으로 조직된 연합기업소뿐만 아니라 도에도 자체 무역이 허용되는 새로운 무역체제는 1991년 수립되었다. 새로운 무역체제는 대외경제위원회를 비롯한 위원회와 부에서 하는 국가무역과 도행정경제위원회에서 하는 지방무역체제로 구성되는데, 생산을 담당할 위원회, 부들과 도행정경제위원회에서 무역관리부서와 무역회사를 두고 자기 부문, 자기 지방에서 생산한 수출품들을 직접 내다 팔고 필요한 제품들을 직접 사다 쓰게 하는 무역체제와 방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²²⁾고 한다.

새로운 무역체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지도 밑에”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생산을 담당할 위원회·부·도에서 스스로 자기의

21) 『경제연구』에서 연합기업소가 자체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안현진의 논문이다. “련합기업소는 국가계획위원회의 지도 밑에 계획을 직접세우는 계획 단위, 생산의 직접적인 조직지휘, 집행 단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생산물의 일부를 대외시장에 팔고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사다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안현진, “연합기업소의 생산기술적 구조와 생산정상화,” 30쪽). 안현진의 논문이 1990년 말에서 1991년 초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연합기업소의 자체 무역은 1989년 말에서 1990년 초 사이에 허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22) 리신희, “새로운 무역체제의 본질적 특성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 제4호 (1992), 30쪽.

생산능력과 자연 경제적 조건들을 타산한 데 기초하여 수출입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고 무역계약을 체결하며, 무역계획과 계약에 따라 수출품을 생산하고 무역 활동도 직접 한다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이러한 획기적 조치를 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외무역의 발전을 통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발전시키자는 데 있었다.²³⁾

도 단위에 무역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연합기업소체제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연합기업소체제는 경제를 연합기업소 단위에서 관리하는 분권화(decentralization) 조치였다. 북한은 연합기업소체제를 도입하기 이전 도경제위원회를 설립하고 도 단위에서 자급자족체제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도 단위에서의 자급자족체제는 북한이 지역 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감수하지 않는 한 지속할 수 없는 목표였다. 북한은 도 단위의 자급자족적 체제를 버리고 연합기업소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도 단위에서의 자급자족적 체계에서 기대한 이점(利點)인 중앙정부의 예산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의 균형적 발전도 도모하려 하였다. 연합기업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고 연합기업소체제에서는 연합기업소와 연합기업소 간의 자재 수·공급이 허용되어 전국적 차원에서 시장(inter-industry market 그리고 inter-regional market)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합기업소는 전반적으로 중공업과 대규모의 경공업 위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연합기업소의 주요 무역 물품은 중공업 관련 제품과 석탄과 같은 지하자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비교우위를 고려할 때 무역을 보다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문은 노동집약적인

23) 리신효, 위의 글, 31쪽.

경공업과 농·수산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연합기업소에서 자체 무역이 실질적(de facto)으로 허용된 상황에서 도 차원의 지방무역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광물과 중공업 제품이 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 연합기업소 무역을 보완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안된 것이었다.

북한은 1987년부터 제3차 7개년 계획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었다. 새로운 경제관리체제인 연합기업소체제를 계획과 동시에 발족시켜 경제 공간의 합리적 적용과 경제관리의 합리화를 주축으로 삼아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1990년 초에 일어난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는 북한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북한에서는 1992년부터 심각한 경제위기가 시작되어 1994년, 1995년, 그리고 1996년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었다. 공식적으로 북한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3년 기간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한다. 그리고 1999년 말에 가서 ‘고난의 행군’이 ‘구보의 행군’으로 바뀌었다²⁴⁾고 하는데 1993년부터 2000년까지의 『경제연구』 분석을 통해 북한이 이와 같이 전례 없는 경제위기를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살펴보자.

24) “지난해 주체 88(1999)년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난 력사의 해였다. 최근 몇 해 동안 우리 인민은 튼튼한 시련의 언덕을 넘어왔다. 우리가 벌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사전이였다. 지난해 우리 인민은 불굴의 투쟁을 벌려 여러 해째 계속된 어려운 행군을 구보행군으로 전환시켜놓았다”(리중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 경제정책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전투적 기치,” 『경제연구』, 제1호(2000), 2쪽).

3. 경제위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

1) 혁명적 경제전략(1994~1996):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기간 중 김일성이 제시한 ‘10대 전망목표’의 확고한 기반을 새로 도입된 연합기업소체제를 통해 다지려 하였다. 그러나 독립채산제, 작업반우대제, 도급제 등 경제 공간을 통해 경제관리의 합리화, 즉 계획의 합리화는 이전의 중앙집권적 지시 계획체제와 물질적 동기보다는 정치적·도덕적 동기를 앞세우는 동원 체제에 익숙해져 있었던 북한 근로자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었으며 도입 초기 그들의 적응에 대한 미숙함 때문에 북한지도부가 바라던 대로 신속한 결과를 주지 못하였으며 제3차 7개년계획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제3차 7개년계획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외인(外因)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었다.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에 따른 무역 및 대외 경제 교류의 급격한 감소는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당시 북한은 대외 무역의 70% 정도를 사회주의 시장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주요 전략물자라고 할 수 있는 원유와 코크스탄은 전적으로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었고 사회주의시장의 붕괴 이후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주의시장의 붕괴라는 충격(shock)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북한 경제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제3차 7개년 계획의 실패는 내인(內因)적 요인에도 기인하는데, 북한의 자립 노선을 바탕으로 구축된 자기완결적 생산 구조가 충격을 흡수하거나 분산 희석하지 못하고 충격을 확산시킬 뿐 아니라 위기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10대 전망목표’의 확고한 토대를 7개년계획 기간 중 마련하여 자신들의 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원대한 목표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북한은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에 북한지도부는 1993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에서 ‘혁명적 경제전략’을 채택하였다. ‘혁명적 경제전략’이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년 동안을 완충기 기간으로 설정하고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등 3대 제일주의 방침을 관철시키고 석탄, 전력, 철도운수, 그리고 금속 등 선행 부문을 계속 발전시켜나간다는 것이다.²⁵⁾

한국 전쟁 이후 줄곧 이어온 ‘중공업 우선 노선’에서 농업, 경공업, 무역으로 경제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의미에서 ‘혁명적 경제전략’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들이 무려 40년 동안 일관되게 고수해온 노선을 바꾸어야만 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다시 말하여 ‘혁명적 경제전략’이란 북한의 경제발전 노선인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중공업 우선 노선’에서 농업, 경공업, 그리고 무역과 같은 소비재 생산과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가경제의 기반이 되는 석탄, 전력, 철도운수, 그리고 금속 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것이다.²⁶⁾

25) 김일성, 『1994년 신년사』(단행본)(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5쪽.

26) 북한의 모든 공식 문헌에서는 ‘혁명적 경제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 당이 내놓은 혁명적 경제전략은 완충기기간에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인 석탄공업, 전력공업, 철도운수를 확고히 앞세우고 금속공업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입니다”(김정일 지적, 서승환, “경공업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는 것은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전략적 사업,” 『경제연구』, 제2호(2004), 8쪽). 원래 금속공업은 인민경제 선행부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혁명적

완충기 기간은 원래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경제연구』 1996년 제2호를 통해 발표된 김상학의 다음 글에서 고난의 행군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혁명적 경제전략 관철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혁명적 경제전략을 끝까지 관철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 있다. 혁명적 경제전략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혁명선렬들이 추켜든 붉은기를 높이 들고 백두밀밭에서 창조된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야 한다.²⁷⁾

한편 김상학은 ‘혁명적 경제전략’ 관철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데 ‘혁명적 경제전략’이 결국 소비재 생산 확대와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책임을 고려할 때 소비재 생산 확대와 확보에는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아직 심각한 식량문제와 생필품의 부족 현상은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고 통제(control)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요인 중 외인적 요인이 핵심을 이루는 사회주의시장의 붕괴로 인한 원유와 코크스탄(cokes)과 같은 전략물자의 수입 중단 및 감소는 완충기 기간 중 개선되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고 통제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는 것이 어떻게

경제전략’이 나온 이후 선행부문과 함께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되고 이후에는 선행 부문에 포함하여 쓰고 있다.

27) 김상학,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과 축적과 소비사이의 균형,” 『경제연구』, 제4호(1989), 11쪽.

가능하였을까?

소비재 생산 확대와 확보를 강조하는 혁명적 경제전략은 연합기업 소라는 새로운 체제가 도입되고 체제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새로운 체제는 시장을 기반으로 하며 북한의 기업들은 자재의 수·공급 그리고 사람들은 소비재의 상당 부분을 이미 시장을 통해 거래하고 있었다. 소비재의 생산 확대와 확보에 핵심을 둔 ‘혁명적 경제전략’은 새로운 체제에서 확대되고 있었던 시장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각 기업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신의 단위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였다. 이것은 기업소들 간의 계약 관계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국영기업소들이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이전 체제에서는 각 기업소가 국가의 지시를 받아 자재의 수·공급을 해결하였으나, 독립채산제에서는 기업소들 간에 맺은 계약으로 자재의 수·공급을 해결하였다. 그리고 각 기업소는 경영상 독자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 기업소와의 협상은 계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맺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또한 이미 계약된 자재가 필요 없거나 맺은 계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절차를 밟아 재협상을 통해 이미 맺은 수·공급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공급자가 품질의 조건을 어졌을 때 수요자는 자재의 질이 낮은 대신 싼값으로 받거나 그것을 다른 자재와 교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재에 있는 품질적 결함을 고쳐줄 것을 요구하거나 어떤 자재의 인수를 거절하고 이미 지불한 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수요자가 자재의 결함을 고쳐줄 것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자재로 바꾸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대금의 지불을 보류할 수 있다.²⁸⁾ 기업들

간에 보다 정교해지는 이러한 협상²⁹⁾은 시장이라는 기제를 통해 자재

28) 안윤옥, “기업관리의 합리화에서 계약관계가 노는 역할,” 『경제연구』, 제2호(1993), 39쪽.

29) 기업소 간의 상업적 형태에서 이루어지는 자재의 수·공급은 원칙적으로 유일 도매가격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일 도매가격이란 도매가격 수준이 사회적 필요로동의 양적 크기, 즉 가치 형태의 양적 크기에 상응하게 설정된 가격을 가리킨다. 북한은 이 유일 도매가격이 원료, 자재를 비롯한 시초생산물을 늘리고 그것을 절약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자극하는 효과적인 경제적 공간으로 되고 있다고 한다[강기철, “우리나라 도매가격의 우월성,” 『경제연구』, 제4호(1995), 30쪽]. 어느 한 기업소 생산성(productivity)을 높여 유일 도매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해당 물자를 생산할 수 있으면 그 차이를 기업의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유일 도매가격이 효과적인 경제적 공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자재 수·공급은 (제한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배분(resource allocation)이다.

그러나 안윤옥의 논문에서 설명되었듯이 품질의 고하(高下)에 따라(보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품질이 낮았을 경우) 매매 가격이 유일 도매가격보다 낮아 질 수 있고, 기업소가격(도매가격에서 거래수입금을 뺀 가격, 즉 원가와 이윤으로 구성된 가격)은 유일가격으로만 정하지 않는다. 즉 석탄, 광물과 같이 원가 수준이 자연·지리적 조건이나 생산방법의 차이로 인해 심하게 차이나는 생산물에 대해서는 원가 수준이 비슷한 여러 기업소들의 원가를 평균으로 원가 수준을 규정하거나 개별적기업소의 원가에 기초하여 기업소가격을 정한다. 기업소가격은 또한 유일 도매가격처럼 한 전망 기간에 그 수준을 고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2~3년에 한 번씩 개정하도록 하여 기업소가격이 원가저하를 위한 투쟁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된다고 한다(강기철, “우리나라 도매가격의 우월성,” 31쪽). 이렇듯 유일 도매가격에서의 협상의 여지 그리고 보다 유동적으로 책정되는 기업소가격은 기업소간의 거래에서 협상의 역할을 높여 자원배분에서 시장을 역할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류길선은 원가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원가 변동을 고려한 부문평균전망계획원가(시기적 가변성을 고려하여 계산된 원가)를 적용하여야 가격의 현실성을 담보하고 기업소들의 능동성도 보장할 수 있다는 매우 대담한 주장을 하였다. 즉 생산 현실이 고려되어야 타당한 가격이 나오게 되므로 유일 도매가격도 가변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매가격을 갖고 기업소들 간의 상품거래가 이루어져야 기업소들이 채산을 정확히 할 수 있어 기업소 간의 상품 교환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류길선, “기업관리에서 가격공간의 합리적리용,” 『경제연구』, 제3호(1994), 40쪽). 결국 류길선 주장의 요지는 상품 교환을 시장에 맡기자는 것인데 이와 같은 주장이 나올 정도로 시장이 활성화되고 확대되었음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의 수·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물자의 절약은 이제 그냥 미덕이 아니라 국영기업소들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국영기업소들은 생산수단을 등가성의 원칙³⁰⁾에 따라 팔고 사는 형태, 상업적 형태로 주고받는다.

류길선의 주장은 일정하게 공론화되었고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2년 후에 나온 류길선과 유사한 주제를 다룬 논문에서 장상준은 “먼저 가격을 정할 때에 상품에 들어 있는 사회적 필요노동에 정확히 의거하여야 한다”는 김일성의 교시를 근거로 사회적 필요노동지출만이 가격균형설정에서 서로 다른 사용가치를 비교하고 하나의 유일한 기준에 따라 그 수준을 규정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된다며 유일 도매가격을 고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류길선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장상준, “사회주의사회에서 가격균형설정의 근본요구,” 『경제연구』, 제1호(1996), 15쪽].

30) 북한은 상품 교환에서 등가성법칙이 가치법칙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이라고 한다. 가치법칙은 상품들에 체화되어 있는 사회적 필요노동인 가치로 규정되는 것을 가리키는 반면 등가성법칙은 준 것만큼 받는 등가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준 것만큼 받는 등가성의 원칙은 가치에 의한 등가교환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가치가 아닌 비가치의 교환인 경우에도 포괄함으로써 상품 교환 일반의 가장 보편적인 의미를 담게 된다고 한다. 또한 단일한 전민소유제가 확립되어 사회주의 완전승리가 이룩되면 상품생산이 없어지는 것만큼 가치법칙의 작용도 끝나게 되지만, 경영상 독자성을 가진 기업소들의 경제거래는 여전히 등가성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며 봉사와 같은 활동의 교환 영역에서도 등가성의 원칙에 기초한 회계가 정확히 이루어진다고 한다[정광수, “등가성의 법칙은 교환일반의 경제법칙,” 『경제연구』, 제3호(1995), 23~26쪽].

가치법칙은 정광수의 앞의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가치, 즉 해당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노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상품 교환에서 시장은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준 것만큼 받는다는 등가성법칙이 상품 교환 영역에서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는 주장은 시장을 통해 상품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북한에서 봉사란 서비스업을 뜻하는데 서비스는 노동으로 가치가 평가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치법칙이 적용될 수 없고 준 것만큼 받는 등가성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며, 정광수의 논문에서 봉사, 즉 서비스업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서비스업이 완충기 기간(즉 고난의 행군기간) 중 크게 확산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완전승리, 즉 공산주의사회로 이행하여도 기업소들의 경제거

이것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물자의 절약을 추구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였는데 각 기업소가 자재를 등가성의 원칙에 따라, 즉 손해 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수·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각 기업소는 반드시 필요한 자재만을 확보하게 되어 물자 절약을 도모할 수 있었다. 물자 절약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통제도 강화되었다. 관계기관들에서 기업소가 만약 필요 없는 자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파악되면 기업소는 그 자재를 자신이 산 가격에 다시 관계기관에 팔아야 하며 자재 여분에 대한 관계기관의 판단 여하에 따라(기업소가 자재를 불법 또는 비법적인 수단으로 확보하였다는 판단) 강제로 몰수하고 대상 기업소 책임자에게 벌금을 물리도록 하여 기업소가 반드시 필요한 자재만을 확보하도록 하였다.³¹⁾ 이렇듯 북한은 경제위기를 맞아 모든 생산부문에서 절약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실질적 물자 절약, 즉 효율적 자원배분은 독립채산제를 기반으로 한 연합기업소체제가 활성화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원배분은 시장을 더욱 의존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래는 여전히 등가성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된다(즉 시장을 통해 상품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있어 시장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이 상품 교환에서 필수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교육하고 있다 [등가성법칙에 관한 논문은 정광수의 앞의 논문 외에 안운옥, “기업관리의 합리화에서 계약 관계가 노는 역할,” 『경제연구』, 제2호(1993); 류영철, “2중독립채산제는 연합기업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방법,” 『경제연구』, 제4호(1993); 조명철, “가치법칙과 등가성의 법칙과의 관계문제에 대한 연구,” 『경제연구』, 제1호(1994) 등 ‘혁명적 경제전략’이 등장한 완충기 기간 중 특히 강조되었다].

31) 안운옥, 위의 글, 39~40쪽.

2) 국가 주도의 시장 활용 및 시장의 확산

소비자들의 생필품과 생활용품의 생산을 주목적으로 두는 ‘혁명적 경제전략’으로 ‘8월 3일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은 더욱 탄력을 받고 전국적으로 확산·심화되었다. 북한 경제 모든 부문의 공장·기업소에 ‘8월 3일 인민소비품’ 분(分)공장, 직장, 작업반들이 더 많이 나오고 가내작업반, 부업반들이 널리 조직되어 ‘8월 3일 인민소비품’ 생산이 더욱 빨리 늘어나게 하였으며 특히 평양시에서는 1994년에 전년인 1993년보다 생산은 121% 장성시키고 제품의 수는 1.3배로 늘렸다고 한다.³²⁾

‘8월 3일 인민소비품’ 운동은 도시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었는데 황주군 가내생산협동조합에서는 그 지방의 원료를 활용하여 130여 가지의 초물제품, 90여 가지의 돌공예품을 생산하였다고 한다. 1984년 8월 3일 발단된 이 운동은 10년 동안 각지에 4만 6,500여개의 가내작업반, 부업반이 꾸려졌으며 이 기간 인민소비품생산은 3.5배, 종류는 1만 1,700여 종으로 늘어나고 시·군 직매점들의 연간 판매액은 4.1배로 증가하였다³³⁾고 한다.

‘8월 3일 인민소비품’ 운동은 생산기업소들이 생활필수품직장, 가내작업반, 부업반 등을 꾸려 부산물이나 폐설물, 그리고 유휴 자재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소비품을 생산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소비품을 직매점과 같은 유통망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의 영역이 아니라 시장의 영역에서 시작되었으며 ‘혁명적 경제전략’으로 인해 더욱 심화된 형태로 전국적으로 확

32) 『조선중앙년감 1994년』(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5), 171쪽.

33) 『조선중앙년감 1995년』, 157~158쪽.

산되어 경공업 제품이 국영상점을 통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고난의 행군 기간 중 많은 수의 북한 사람들의 생활용품 수·공급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되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반 사람들은 생활용품, 그리고 나아가서는 생활필수품 수·공급 문제를 ‘8월 3일 인민소비품’ 운동 등을 통해 해결하면 할수록 시장은 고난의 행군 기간 중 자원배분의 기제뿐 아니라 생활(또는 생존)의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8월 3일 인민소비품’ 운동이 북한 사회에서 정착되는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같이 경제위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가 완화되면서 시장이 자생적으로 생겨나서 확산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관리체제인 연합기업소체제와 그것을 현실에서 더욱 심화·가속화시키는 ‘혁명적 경제전략’의 틀에서 ‘8월 3일 인민소비품’ 운동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즉 국가가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통제를 잃고 또는 통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운동이 자생적으로 확산·심화된 것이 아니라, 시장을 제도화시키는 연합기업소체제와 이를 추동하는 ‘혁명적 경제전략’으로 탄력을 받아 운동이 한층 더 심화·확산되었던 것이다.

‘혁명적 경제전략’은 도시와 공업 부문에서의 연합기업소체제와 지방과 농촌에서의 경제 분권화를 더욱 가속화시켰으며 도시와 지방 그리고 공업과 농업은 시장을 통해 연결되었다. 원래 북한에서 농산물 수매는 양곡과 중요 농산물, 공예작물에 대하여 국가가 유일 수매가격을 적용하는 계획수매와 계획수매하고 남은 양과 계획수매 품종을 제외한 모든 수매 품종은 자유 수매를 통해 유통되었으나, 국가에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화학비료, 농약, 경유 등 생산요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자, 자유수매 유통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계획수매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도시로의 식량공급이 제대로 이루어

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도시의 식량 배급제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 것이다.

완충기 기간 중 북한의 식량생산은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1980년대 말에 비해 약 절반으로 줄었다. 도시와 농촌의 인구비율이 약 60 대 40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고난의 행군시기 도시로의 식량공급은 정상적으로 공급되던 것에 비해 대략 60% 이상 감소한 것이었다. 도시의 식량배급체계는 붕괴되었고 농촌에서는 협동농장이 와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경리는 부업이 아닌 주업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자유수매를 통해 농산물을 유통시키게 되었다. 경제위기로 계획수매 유통이 실종된 것이다.

원래 자유수매 유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농산물생산과 소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계절별로 차별적인 수매가격을 허용해주었는데³⁴⁾ 이미 완충기간이 설정되기 이전부터 자유수매가 유통의 주를 이루게 되면서 식량수매 유통에서도 시장이 확산되고 활성화되었다. 국가는 위기 극복의 타결책으로 지방의 자급자족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간의 물자교류(inter-regional trade)를 통한 농산물 유통을 허용했다.³⁵⁾ 즉 지역과 지역을 연결시켜주는 지역 간 시장(inter-regional market)이 허용된 것이다.³⁶⁾

34) 신동식, “사회주의사회에서 농산물수매의 본질과 특징,” 『경제연구』, 제2호(1993), 37쪽.

35) 이것은 신동식의 다음 글에서 확인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수매는 또한 각 지역 간의 상품과 농산물의 경제적 교류를 강화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지역 간의 균형을 보장하며 외화원천을 늘리고 농산물에 대한 국가적 예비를 조성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신동식, “사회주의사회에서 수매유통이 있게 되는 조건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 『경제연구』, 제2호(1995), 45쪽].

36) 김응교의 다음의 글에서도 농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재 상품도 지역들 간에 유통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군들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협동생

농촌에는 원래 농민시장이 존재했는데 ‘혁명적 경제전략’이 나오면 서 여러 종류와 범위를 가진 시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방과 농촌에서 가장 성행하였던 시장은 국가와 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경제위기를 맞아 자구책으로 그리고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중소 규모의 시장들이었다.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작동하고 있었던 이러한 시장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래수입금 징수의 문제, 자유주의 사상의 확산³⁷⁾ 등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식량공급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시장을 통해 최소 수준이나마 생계를 유지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계수단과 방법을 막을 수는 없었다. 북한은 이러한 시장들을 맹목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국가적 수매기관들을 동원하여 통제 영역에 끌어들이려고 하였다. 사회급양(社會給養)사업이 북한의 그러한 노력 중 하나였다.

사회급양은 여러 가지 식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회주의 상업

산을 조직하며 나가는 것도 역시 군내 인민들의 소비생활을 높여 나가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그것은 매개 군들은 자연지리적 조건에서 차이가 있으며 인민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소비품생산에서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도 있기 때문이다”(김응교, “사회주의근로자들의 소비생활을 위한 원천과 그 동원리용문제,” 『경제연구』, 제1호(1997), 39쪽).

- 37) 박경옥은 “원래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재생산을 유지해나가는 것은 자본주의재생산에 특징적인 현상이며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는 허용될 수 없고 사회주의계획경제는 리윤보위제와 량립될 수 없다”면서 당시 제도적 측면에서 시장뿐 아니라 사상적 측면에서도 자본주의적 현상이 들불과 같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그는 “가치법칙의 의의를 절대화하지 말고 보조적 위치에서 보충적 수단으로 리용하여야 사회주의의 과도적 특성에 맞게 경제관리를 합리화하면서도 리윤본위의 자본주의적 기업 관리방법을 배격하고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를 옹계 관리운영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당시 경제관리를 합리화한다면서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는 현상이 적지 않게 있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박경옥, “리윤보위를 배격하고 경제관리에 가치법칙을 옹계 리용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제2호(1996), 50~52쪽).

의 한 부분인데 지역마다 망(網)이 형성되어 사회급양망을 이루고 있었다. 사회급양망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시장이 번성하면서 시장과는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국가에서 사회급양에 필요한 원자재를 원만히 공급하지 못하자 사람들의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수요자들을 시장에 뺏기고 있었다. 이에 북한은 사회급양에 필요한 원자재를 사회급양망 자체로 생산, 보장하라고 독려했다. 즉 원료기지조성사업을 벌여 원료 기지를 조성해놓으면 국가에서 원자재를 받지 않고도 식료품 자체로 생산,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부업생산물의 원자재 원천들이 얼마나 사회급양망들의 원자재로 실현되는가 하는 것은 수매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는데, 사회급양망에서 원자재 수매체계를 세우고 수매방법을 개선하여 협동농장이나 개인부업생산물 수매를 통하여 더 많이 끌어들이야 한다³⁸⁾는 것이다.

사회급양망에 대한 위의 설명을 좀 더 알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급양망이란 식료품을 생산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종의 식료품 상점망 또는 슈퍼마켓 체인과 같은 것으로 국가가 운영한다. 그런데 경제위기로 사회급양망에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자생적 시장이 늘어나면서 사회급양망의 운영이 어려워진 것이었다. 정부는 해결책으로 사회급양망 수매방법을 개선하여 원자재를 생산하는 협동농장과 개인들이 사회급양망에 더 많은 원자재를 공급하도록 하여 사회급양망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다. 여기서 수매방법을 개선한다는 의미는 식료품 원자재 확보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식료품 원자재가격보다 높거나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가격으로 책정하여 한다

38) 황경직, “사회급양망들에서 원자재를 자체로 생산보장하는 것은 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제1호(1994), 44~46쪽.

는 것이다.

사회급양사업은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급양망을 시장보다 경쟁력 있게 만들려면 운영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여력이 고난의 행군기간에 정부에게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급양망을 전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 사회급양망을 시범적으로만 운영하고 사회급양망을 확산·확대시키기보다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중소 규모의 시장을 통합하여 정규 시장으로 만들어 시장을 통제가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들이려 하였다.³⁹⁾ 그러나 고난의 행군이 지속되는 동안 이러한 시장의 정규화는 실행될 수 없었으며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중소 규모의 시장은 들불과 같이 북한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3) 경제 분권화의 심화·확대: 군농업연합기업과 지방예산제

북한은 시장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았지만 자유시장 창출에 대한 통제의 틀마저 없애고 좌시하지 않았다. 지방과 농촌에서는 시범적으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국영농장위원회, 또는 종합농장으로 바꾸어 지역적 거점으로 선정된 군의 모든 사업이 당의 노선과 정책, 방침테두리에서 관철되도록 하였다.⁴⁰⁾ 이러한 전환은 협동적 소유에서 전 인민적 소유라는 미명아래 진행되었으나, 지방과 농촌에서 시장

39) 북한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 여력이 생기자 2003년부터 이렇게 자생적으로 생겨난 시장들을 국영시장과 통합하여 ‘종합시장’이라는 형태로 통제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었다.

40) 서재영, “소유형태에서의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성과적으로 극복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빛나는 승리,” 『경제연구』, 제2호(1994), 31쪽.

이 확산, 확대되면서 시장화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을 우려한⁴¹⁾ 일종의 선제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협동적 소유에서 전 인민적 소유로의 전환은 생산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성취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북한은 선봉군을 비롯한 일부 군들에서 전환을 시범적으로 시도하였으나, 크게 확산시키지 못하고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그것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군농업연합기업소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군농업연합기업소는 농업의 종합적 관리 단위로서 규모가 큰 군들에 농장과 농업에 복무하는 기업소들을 묶어서 조직한 대규모의 생산 단위, 집행 단위이며 2중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다.⁴²⁾

군농업연합기업소는 농촌에 협동적소유가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협동농장들과 그에 복무하는 국영기업소들을 망라하여 조직되는데 경영위원회일군들은 계획작성과 계획실행평가, 고정재산관리와 그 이용, 자재 공급과 관리, 노력관리와 노동보수, 재정관리와 수입분배 등 생산과 경영 활동이 모든 것을 국영기업소의 관리일군들과 같이 자체적으로 세우고 실행해나가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었다. 군농업연합기업소가 있는 군은 군 단위 독립채산제가 되는데 전통삼은 군 단위 독립채산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41) 서재영은 이런 우려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사회주의적소유관계의 공고발전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못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사업을 잘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약화되어 자본주의가 되살아나게 되며 종당에는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은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에서 보게 되는 역사적 교훈이다”(서재영, 위의 글, 31쪽).

42) 주호준, “농업연합기업소는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는 합리적인 형태,” 『경제연구』, 제4호(1994), 25쪽.

군단위독립채산제규정에 의하면 경영위원회일군들의 생활비는 매달 가동정액생활비의 일정한 비율도 전분생활비를 지불하고 연말에 균적인 알곡생산계획수행률에 따르는 확정생활비를 지불하게 된다. 그리고 균적인 알곡생산평가계획과 국가예산납부계획을 수행하고 국영농업기업소의 원가를 낮추어 군경영위원회적으로 초과리윤을 냈을 때는 상금기금을 세우고 상금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중략)… 협동적소유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매 협동농장들을 단위로 생산계획, 원가계획 등이 평가되고 분조를 단위로 로력일을 재평가하여 분배몫이 규정되는 결산분배제를 실시하며 협동농장에서의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가 적용된다.⁴³⁾

군 단위 독립채산제가 실행되는 군안의 협동농장 분조는 생산 단위(production unit)뿐만 아니라 회계 단위(accounting unit)까지 되었는데 2중 독립채산제가 적용되면서 협동농장의 분조는 실질적인(de facto) 독립채산제 단위가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주의제도하의 농촌에서 매우 높은 단계의 경제 분권화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군농업연합기업소는 기존의 연합기업소와 마찬가지로 군농업연합기업소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받으며 운영되기 때문에 당과 국가 지도 아래 놓이면서 정치적으로는 좀 더 중앙집권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군농업연합기업소는 기존의 연합기업소와 같이 (일반적으로 생산물 및 완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정한 수매가격과 도매가격 등을 적용하지만) 연합기업소 안에서 유통, 소비되는 생산물의 가격은 연합기업소가 자체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즉 연합기업소 안에 시

43) 전통삼,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단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것은 소유전환을 가장 순조롭게 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 『경제연구』, 제1호(1998), 32쪽.

장⁴⁴⁾이 있고 여기서 유통, 소비되는 생산물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생산물의 가격을 사회적 필요노동지출에 기초하면서도 농업생산물 상호 간의 가격균형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제정하도록 하여 군농업연합기업소에서 가격 공간이 적극 활용되도록 하였다.⁴⁵⁾ 북한은 군을 군농업연합기업소 중심으로 조직하여 시장의 확산과 확대에 의해 느슨해지고 있던 당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당의 통제 안에서 경제 분권화를 더욱 심화시켜 가장 낮은 단위까지도 경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생산을 정상화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군 단위 독립채산제는 그 의미상 군 단위에서 스스로 무역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도 단위에서 이미 1992년부터 자체적으로 대외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군농업연합기업소가 1994년부터 조직되면서 군농업연합기업소가 있는 군에서도 자체 무역권이 허용되었던 것을 강영원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영원에 의하면 북한의 지방공업은 1994년 현재 군마다 평균 20여개의 지방산업 공장들을 이루고 있으며 군은 지방의 소비수요를 자체로 생산,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제 단위로 튼튼히 꾸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강영원은 신양군을 모범적 예로 들면서 보다 구체적인

44) 강련숙은 군농업연합기업가 산하 농장, 기업소 상호 간에 필요한 영농 설비, 자재를 조절하여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은 자재상사를 통하여 자체로 처분할 수 있으며 필요 없게 된 설비들을 기업소 상호 간 규정된 범위에서 유상으로 팔고사거나 무상 이관할 수 있다고 하여 군농업연합기업소안에 시장(intra-market)도 있지만 군농업연합기업소 간의 시장(inter-market)도 있음을 시사하였다[강련숙, “군농업연합기업소 재정의 특성,” 『경제연구』, 제1호(1995), 33쪽].

45) 량세훈, “2중독립채산제는 농업연합기업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방법,” 『경제연구』, 제3호(1997), 28쪽.

설명을 하였는데 신양군에서는 30여 개의 지방 산업공장들을 튼튼히 갖추어놓고 다종다양한 소비품을 생산하여 군안의 소비수요를 거의나 자체로 충족시키고 있으며 고무나 강재, 원면 같은 것만 대주면 군안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자체로 생산, 보장할 수 있는 물질적토대가 튼튼히 꾸려져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군에 없는 몇 가지 원자재도 수출생산기지를 꾸리고 그 생산물을 대외시장에 좀 내다 팔기만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게 된다”⁴⁶⁾며 군 자체에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음(또는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그에 의하면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많은 소비상품을 생산하게 됨으로써 지난날에는 국가로부터 해마다 많은 돈을 받아야만 군살림살이를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군이 번돈으로 군살림살이를 하고도 많은 돈이 남아 매해 국가에 많은 리득을 주게 되었다”⁴⁷⁾고 하였다. 군이 국가의 예산 수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군농업연합기업소가 조직된 배경을 ‘혁명적 경제전략’과 연관지어 재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3년간을 완충기로 설정하고 경공업, 농업, 그리고 무역 등 3대 제일주의 방침을 ‘혁명적 경제전략’을 통해 관철시키려 하였다. 아울러 석탄, 전력, 철도운수 등 선행 부문을 앞세우고 금속 공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도 함께 세웠다. 지방과 농촌에서 ‘혁명적 경제전략’은 군농업연합기업소 조직으로 압축되는데 결국 경제 분권화를 군 단위 독립채산제까지로 세분, 심화시켜 군 단위에서 경공업, 농업, 그리고 무역

46) 강영원,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켜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 중요담보,” 『경제연구』, 제3호(1994), 18쪽.

47) 강영원, 위의 글, 18쪽.

을 활성화시켜 지방의 군 단위까지 자급자족적 경제체계를 만들고⁴⁸⁾ 나아가서 여기서 얻어지는 잉여를(또는 지방 경제에서 국가의 몫을 군 단위로까지 할당 하여 거두어 드리는 재화를) 선행 부문에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호준은 군농업연합기업소가 국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 연합기업소와 거기에 망라된 농장, 기업소들의 이익을 옹계 결합시켜 다 같이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게 하는 가장 정당한 조치⁴⁹⁾라고 평가하면서 위의 해석을 뒷받침 하고 있다. 그리고 강련숙은 군농업연합기업소가 산하 농장들과 기업소들에서 생산물 판매할 때마다 조성되는 거래수입금, 국가기업리익금, 지방유지금,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 제때에 종합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군농업연합기업소 조직의 배경 중 하나가 국가의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면 현실은 어

48) 한 가지 유의하여야 할 점은 모든 군이 군농업연합기업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군농업연합기업소는 “숙천군과 같이 규모가 큰 군, 다시 말하여 부침땅 면적이 넓고 로력자가 많으며 물질기술적 수단이 풍부한 군에서 조직하게 된다”[김향란,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넘기는 형태와 방법,” 『경제연구』, 제2호(1995), 28쪽]. 그러므로 중소 규모의 군들에서는 군농업연합기업소를 조직하기 어렵다. 전룡삼에 의하면 군농업연합기업소는 김일성에 의해 1981년부터 숙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이후 군 단위 독립채산제대렬이 수십 개로 늘어났으며 앞으로 해마다 그 대렬이 더욱 급속히 확대될 것이 예견된다고 하여(전룡삼,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단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것은 소유전환을 가장 순조롭게 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 22쪽) 군 단위 독립채산제가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전룡삼의 논문이 『경제연구』, 1998년 제1호에 실렸으니, 그의 앞의 글은 1997년까지의 이야기이다. 수십 개가 정확히 몇 개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북한에는 약 200여 개의 군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전체 군의 약 10~30% 정도가 군농업연합기업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9) 주호준, “농업연합기업소는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는 합리적인 형태,” 25쪽.

떠했을까? 이러한 분권화의 심화·세분화 조치와 연합기업소체제는 과연 현실에서 효과가 있었을까? 북한에서 매년 발간하고 유일하게 일정 정도의 정량적인 통계 수치가 담긴 『조선중앙년감』을 통해 분석해보자.

1995년 발간된 『조선중앙년감』에 따르면 1994년 한해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인민소비품생산을 균중적 운동으로 전개시키는 데 성과가 이룩되었다고 한다.⁵⁰⁾ 1994년은 군농업연합기업소가 본격적으로 조직된 해로서 연간 계획에 적용을 받는 지방공장은 많은 경우 새롭게 조직된 군농업연합기업소에 소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지방공장들이 새롭게 조직된 군농업연합기업소에서 부여된 경제 공간을 활용하여 생산을 정상화시키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연감에 의하면 “각 도무역관리국산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60여 개의 수출품생산기지를 새로 조성하고 연간 수출액을 전해에 비해 108.8%로 장성시켰으며 강서구역, 북청군, 신포시, 온천군, 연안군, 세포군을 비롯한 많은 시, 군들에서 상반기기간에 연간계획을 훨씬 초과수행하는 자랑을 떨쳤다”⁵¹⁾고 한다. 군농업연합기업소가 있는 군은 자체 무역권이 허용되었다는 위의 추정을 증명해주는 대목이며 새롭게 조직된 군농업연합기업소를 통해 여러 군에서 무역을 활발히 벌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0) “경공업제품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전국의 수천 개의 지방산업공장에서 소비품 생산량을 늘였으며 연간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지방공업부적인 중요소비품생산량은 전해보다 1.2배 늘어났으며 720여 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연간계획을 1~2개월 앞당겨 수행하였다.” 『조선중앙년감 1995년』(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5), 157쪽.

51) 『조선중앙년감 1995년』, 158쪽.

『조선중앙년감 1996』에 따르면 “1995년 한해 도, 시, 군들에서도 ‘고난의 행군’ 정신의 요구에 맞게 난관을 주동적으로 뚫고나가면서 당의 지방예산제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자체의 수입으로 지방 예산지출을 보장하고도 거액의 돈을 중앙예산에 들여놓았다”⁵²⁾고 한다. 정확한 수치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군농업연합기업소를 조직한 목적이 군의 자급자족적 경제체계를 만드는 한편 국가에게 예산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또한 “지방무역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지금까지 500여 개의 수출품생산기지를 꾸려놓고 50여 개의 나라와 수백 개의 회사들에 300여 종의 수요 높은 제품들을 대대적으로 수출하였다”⁵³⁾고 하는데 수출에서 북한의 비교우위를 고려해볼 때 주요 수출품은 광물, 농수산물 그리고 간단한 경공업제품이었을 것이다.⁵⁴⁾ 농수산물의 재배와 채취 그리고 가공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 있는 군농업연합기업소는 이 부문에서 그 어디보다 수출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농수산물은 군농업연합기업소가 소재되어 있는 군에서 주로 수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중앙년감 1998』에서는 지방에서의 ‘외화벌이’가 공식적으로 언급되는데, “지방들에서도 자체의 특성에 맞게 원료 원천과 내부에 비를 적극 동원리용하고 외화벌이운동을 힘 있게 벌려 지방예산수입 계획을 기본적으로 수행하였다”⁵⁵⁾고 하였다. 외화벌이는 이제 운동이

52) 『조선중앙년감 1996년』, 158쪽.

53) 『조선중앙년감 1996년』, 159쪽.

54) 리춘원은 “지방무역이 동원리용하게 되는 수출예비는 지방들에 잠재하고 있는 자연원료와 재배원료, 지방산업제품, 부업 및 가내 작업반에서 생산한 제품에 다”라며 위의 추정을 확인시켜준다(리춘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밝히신 지방무역의 본질적 특징,” 『경제연구』, 제3호(1997), 9쪽).

되었을 정도로 지방에서 그리고 군 단위에서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지방의 군들은 자신들의 자원을 활용, 가공하여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였다는 것이다.

『조선중앙년감 1999』에서 흥미로운 점은 1995년, 1996년, 그리고 1997년 국가예산수입총액을 발표하지 않다가 1998년 국가예산수입총액을 197억 9,080만 원으로 발표하고 있는 점이다. 『조선중앙년감 1999』에 따르면 “1998년 예산 수입과 지출 규모는 1990년대 초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주체 1997년에 비해서는 예산수입이 100.4% 증가하였다”⁵⁶⁾고 한다. 이어 연감은 “1998년 국가예산수입의 성장을 이룩하여 재정이 전진의 길에 들어선 것은 국가예산집행과 사회주의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⁵⁷⁾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국가예산수입이 연속으로 줄었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1994년 국가예산수입총액이 416억 20만 원이었으니까 1998년 국가예산수입은 1994년도에 비해 47.6%, 절반이 되지 않는다.⁵⁸⁾ 또한 1999년 국가예산수입총액은 198억 103만 원으로서 계획을 97.2% 수

55) 『조선중앙년감 1998년』, 216쪽.

56) 『조선중앙년감 1999년』, 183쪽.

57) 『조선중앙년감 1999년』, 183쪽.

58) 북한에서 국가예산수입총액과 국민소득총액(National Income)과는 차이가 있다. 모든 재화가 인간의 노동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것에 기초한 북한의 국민소득 개념에는 자기를 위한 생산물과 사회를 위한 생산물 모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를 위한 생산물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국가예산수입은 국민소득에 비해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예산수입총액과 국민소득총액 모두 인간의 노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소득총액의 성장·감소율과 국가예산수입의 성장·감소율은 비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고난의 행군’ 시기 국민소득총액은 국가예산수입총액과 같은 비율로 감소했을 것이며, 1989년에 비해 약 절반 이상 줄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행하였다⁵⁹⁾고 한다. 즉 계획은 203억 700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것은 1998년 실지 국가예산수입총액보다 약 3%밖에 높지 않은 것으로 당시 북한의 상황이 예산 증가 계획을 매우 완만하게 또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⁶⁰⁾

2000년 국가예산수입총액은 204억 533만 원으로 북한 스스로 ‘고난의 행군’ 기간 중 가장 많이 돈을 번 것으로 평가하였다.⁶¹⁾ 그리고 예산수입 원천에 대해서 이전 연감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중앙예산에서는 전자공업성, 룡해운성, 은하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성, 중앙기관들과 소금연합회사, 비단연합회사를 비롯한 29개의 연합기업소들에서 계획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연합기업소가 국가예산수입의 원천으로 연감에 소개된 것은 2000년부터이다.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직된 연합기업소들이 14년 만에 국가의 중앙예산의 수입 담당하는 주체로 나서게 된 것이었다. 초기 도입 기간 중 이전 체제의 제도에 길들여져 있어 도입 초기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던 연합기업소체제가 2000년에 와서야 비로소 북한에서 확고히 자리를 잡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앙예산 수입을 담당하는 연합기업소뿐 아니라, “도, 시, 군들에서도 당의 지방예산제방침⁶²⁾을 높이 받들고 지방의 원료원천과 내부에

59) 『조선중앙년감 2000년』, 189쪽.

60) 북한도 이를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준엄한 시련과 난관이 겹쌓였던 지난 몇 해 동안의 ‘고난의 행군’ 기간 나라의 재정형편도 매우 긴장하였다. 우리 당은 나라의 현실적 조건들을 고려하여 이 기간 경제장성속도를 조절하고 경제 규모를 알맞춤하게 하였으며 국가예산도 이에 맞게 편성하였다”(『조선중앙년감 1999년』, 183쪽).

61) 『조선중앙년감 2001년』, 174쪽.

비를 적극 동원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고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벌인 결과 함경남도 함흥시 사포구역, 남포시 룡강군, 함경북도 화대군, 평안남도 은산군을 비롯한 200여 개의 시, 군들에서 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지방예산수입계획을 124.1% 넘쳐 수행함으로써 지방자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도 13억 7,200만 원을 국가에 들여 놓았다”⁶³⁾고 한다. 이것은 국가예산총수입액에 약 6.5%를 달하며 2000년 북한의 국방비총액인 30억 원에 45.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01년도는 국가예산수입은 계획 215억 7,080만 원에 대하여 실적 216억 3,994만 1,000원으로서 100.3% 수행되었으며 전기석탄공업성, 룡해운성, 은하지도국, 비단련합회사를 비롯하여 27개의 성, 중앙기관과 56개의 련합기업소, 련합회사, 관리국이 국가예산수입을 넘쳐 수행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평양시 삼석구역, 평안북도 염주군, 황해북도 토산군, 함경남도 함흥시를 비롯한 196개의 시·군에서 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2001년 지방예산수입계획을 110.9%로 수행함으로써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도 중앙예산에 7억 7,984만 1,000원을 들여 놓았다⁶⁴⁾고 한다.

62) 지방예산제는 지방들로 하여금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메꾸고 남은 돈의 일부를 국가에 바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예산제를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것은 군의 역할이라고 한다. 지방에서 군은 지방 살림살이운용 단위이며 군을 단위로 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을 실현하고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때문에 군이 지방예산제의 기본 단위가 된다는 것이다(서권혁, “지방예산제와 군의 역할,” 『근로자』, 제6호(1997), 59~61쪽). 지방예산제는 1973년 처음 실시되었으나, 1990년대 초 경제위기가 시작되고 1994년부터 지방으로 경제 분권화가 심화·세분화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63) 『조선중앙년감 2001년』, 174쪽.

64) 『조선중앙년감 2002년』, 164쪽.

4) (과도기적)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의 공고화: 7·1조치에 대한 재해석

2001년 예산수입은 전년에 비해 약 4.5% 늘어났고 계획을 수행하는 연합기업소도 2000년도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늘어났지만, 지방에서 중앙으로 올리는 금액은 2000년도 것에 비해 약 58%밖에 되지 않는다. 지방의 중앙예산납부금은 이와 같이 지방 예산제 단위들에서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남은 돈의 일부를 국가의 수중에 동원하는 예산수입체계였다. 즉 납부방법에서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남은 돈의 일부를 중앙에 바치게 하니 수입이 지출보다 적은 경우에는 바치지 않아도 되었는데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체살림살이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2002년부터 새로운 지방예산편성방법이 도입되었다.⁶⁵⁾ 새로운 방법에서는 지방별로 국가에 바칠 몫을 규정해주고 해당 예산집행 단위 자체로 수입과 지출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이전에는 지방예산수입 및 지출총액과 그 세부지표만 법제화하고 중앙예산납부금은 법제화하지 않았다. 지방예산편성방법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지방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자율권(경제 분권의 심화·세분화로)이 주어졌으나 한편으로는 할당된 금액을 중앙에 납부하여야 되는 임무도 생긴 것이다.

즉 모든 지방은 자신의 살림살이를 스스로 책임지면서 창발성을 발

65) 1994년 이전의 북한 예산수납체계는 위원회, 부, 연합기업소 등이 산하 기업소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체계였던 것이 1994년부터 군 단위 독립채산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인민위원회가 관할 지역의 공장·기업소에서 징수하여 이를 중앙에 바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2000년부터 내각을 중심으로 경제를 꾸리는 체계가 도입되면서 다시 재정 수납의 관리 업무도 부와 관리국으로 이전되었다. 위에서 이전의 지방예산편성방법이란 바로 부와 관리국에서 재정 수납의 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가리킨다.

휘하여 없거나 모자라는 자재는 대용 원료, 자재를 쓰거나 예비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생산을 진행하고 주어진 예산총원 할당액을 중앙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⁶⁶⁾ 이것을 창발성이란 미명 아래 중앙에서 지방을 착취하는 방식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보상이 없는 맹목적인 창발성만을 강조하지 않았다. 연합기업소체제가 도입되고 경제 공간의 활용이 제도화되면서 기업소는 생산을 늘리는 것에 대한 물질적 동기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기존의 국가납부체계는 이것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원래 북한 예산수입의 가장 큰 원천은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이었다. 거래수입금은 원칙적으로 소비재를 생산·판매하는 국영기업소나 생산협동조합이 제품의 도매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소비자에 판매함으로써 얻어지는 부가수입으로서, 국가에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한편, 국가기업이익금이란 모든 국영기업소가 그 기업경영 활동에서 얻어지는 기업소 순수익 중에서 국가의 결정에 따라 기업소에 남겨놓고 쓰기로 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서,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거래수입금은 간접소비세 그리고 국가기업이익금은 법인소득세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기존의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으로 이루어진 국가납부체계는 연합기업소체제가 심화되면서 더욱 강조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아랫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킨다”는 사회주의경제관리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문제가 있었다. 먼저 거래수입금은 생산물의 가격에 일정한 크

66) 오선희, “지방예산편성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2호(2002), 42~43쪽.

기로 고정되어 있어서 원가의 저하 또는 초과와는 관계없이 생산물이 실현된 양에 따라 국가에 납부됨으로써 국가납부몫과 근로자가 가져가는 생활비가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제한성이 있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일한다 하여도 더 많이 가져가는 물질적 동기가 없었다.

한편 국가기업이익금은 기업소자체총당금⁶⁷⁾을 덜고 그 나머지로 납부한다. 국가 입장에서 기업소가 생산계획을 100% 수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획수행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입에서 원가를 보상하고 기업소 자체 총당 몫을 남기면 국가납부금 몫이 적어지거나 미달되게 되어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납부금 몫이 사회순소득의 크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즉 사회순소득이 적어지면 국가납부금 몫도 같은 비율로 적어지기 때문에) 국가납부금 몫은 근로자의 생활비 몫과 기업소 자체 총당 몫보다 큰 비율로 낮아 질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실지로 얼마를 벌어서 국가와 기업소에 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게 하는 제한성을 가진다⁶⁸⁾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집단주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 자신의 창발성을 높이는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의 이익과도 부합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⁶⁹⁾을 고수하는 입장에서 북한은

67) 기업소리익금이라고 기업소 전체 이익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68) 장성은, “공장, 기업소에서 번수입의 본질과 그 분배에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 『경제연구』, 제2호(2002), 40쪽.
69) 이것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기본 취지이며 ‘천리마운동’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바뀐 이유이기도 하다.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천리마운동은 주로 공업 분야에서 개인을 단위로 생산의 증산과 기술의 혁신을 도모한 것이었다면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농업, 건설, 운수, 상업, 보건, 과학, 문화, 예술 등 사회 전(全) 부분으로 확산되어 진행되었던 전사회적

2002년 새로운 국가납부체제이며 계획수행평가인 ‘변수입지표’체제를 도입한다. ‘변수입지표’체제에서 기업소의 수입분배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기업소판매수입에서 생활비를 덜어낸 원가를 제외한다. 그러면 $(V+M)^{70)}$ 라는 변수입이 남는다. 이 변수입은 국가의 몫과 기업소 몫으로 구분되는데 국가 몫에는 국가기업리득금⁷¹⁾과 지방유지금이 포함되며 기업소 몫에는 생활비와 자체충당금이 포함된다. 이때 변수입

혁신운동이었다. 즉, 천리마운동은 공업이라는 제한된 분야에서 개인적인 물질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개인적 혁신 운동이었다면,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회모든 분야에서 작업반(=집단)을 단위로 하는 집단적인 물질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집단적 혁신 운동이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해 북한이 의도한 것은 자연을 개조하는 노동 과정과 인간 의식을 바꾸는 교양 과정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노동자들의 공산주의적 의식을 고조시켜 생산력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리중수, “사회주의 건설의 새 임무와 직맹 단체의 교양적 역할,” 『근로자』, 제1호(1962), 38쪽).

- 70) 북한에서의 생산물의 가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C로 표시), 자기를 위한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V로 표시), 사회를 위한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M으로 표시)로 이루어진다. 변수입은 기업소의 생산물 가운데서 새로 만들어진 것을 판매하여 얻은 화폐수입으로 정의되는데 이것은 $V+M$, 즉 자기를 위한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V)와 사회를 위한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M)의 합이 되는 것이다(장성은, “공장, 기업소에서 변수입의 본질과 그 분배에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 40쪽).
- 71) ‘변수입지표’체제가 도입되면서 국가 납부도 거래수입금이나 국가기업리득금이라는 두 공간이 아니라 국가기업리득금이라는 하나의 공간을 통해 진행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거래수입금은 통합되었다기보다는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원래 거래수입금은 소비재에만 부가되었다가 1994년 군 단위로까지 독립채산제가 확산되면서 생산재에까지 부가되었다. 생산재까지 거래수입금이 부가되면서 거래수입금은 특별한 기능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수익성에 따라 거래수입금을 조절해주어 생산재를 생산하는 기업소의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더는 것이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관리에서 고전적으로 존재하는 일종의 ‘연성예산제한(soft budget constraints)’이었다. 그러나 변수입지표체제가 도입되면서 북한에서 연성예산제한은 반(半)강성예산제한(semi-hard budget constraint)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의 일정한 비율로 국가납부를 먼저 진행한다(그래서 국가의 이익을 먼저 보장한다). 그 나머지로 생활비와 자체충당금을 계산한다.⁷²⁾ 변수입지표체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독립채산제기업소의 경영 활동에 대한 물질적자극의 공간이 된다고 한다.

먼저 변수입계획수행률을 기준으로 자체충당금 몫을 규정하는데 이렇게 되면 변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체충당금 몫도 많아지고 변수입이 적으면 그만큼 자체충당금 몫도 적어진다. 그리고 생활비 몫은 종업원 한 사람당 변수입 기준에 변수입계획실행률을 곱하여 타산하게 되므로 변수입계획실행률을 높여야 생활비 몫을 늘릴 수 있으며(즉 생산물(작업)의 양과 질에 따라, 노동시간 이용정형에 따라, 지출된 노동의 차이에 따라 개별적 생산자들마다 차이가 있게 분배됨으로), 일한만큼 가져가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올바르게 구현하게 된다⁷³⁾는 것이다. 국가납부에서 ‘변수입지표’체계로의 전환은 북한에서 연합기업소체제를 1985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 ‘경제관리의 합리화,’ 즉 ‘계획의 합리화’ 과정에서 마일스톤(milestone)이었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 ‘경제개선조치(7·1 조치)’를 취하는데 일반

72) 변수입을 국가기업리득금과 기업소가 쓸 자금으로 나누는 비율은 당과 국가의 재정정책에 의해 규정된다. 그것은 기업소가 쓸 자금의 많은 몫을 차지하는 평균생활비가 생산실적과 노동생산능력, 축적률 및 소비률에 의하여 당과 국가의 정책으로 규정되는 것과 많은 관련이 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노동생산능력의 장성이 평균생활비의 성장을 륭가하는 경우에는 단위제품의 가격에서 V몫의 감소와 M의 몫의 증대라는 두 요인이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노동생산능력성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따라서 노동생산능력장성을 평균생활비 성장보다 앞세우는 것은 사회순소득을 급속히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장성은, “공장, 기업소에서 변수입의 본질과 그 분배에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 41쪽).

73) 리영근, “기업소경영활동에서 변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제1호 (2003), 43쪽.

적으로 알려진 것과 같이 ‘7·1 조치’가 실시되면서 북한에서 시장으로의 개혁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7·1 조치를 분기점으로 자신들이 1985년부터 추구하여온 ‘경제관리의 합리화’의 완성된 모습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북한현실을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분석이다.

7·1 조치의 핵심 키워드(keyword)는 ‘실리’였다. ‘실리’가 『경제연구』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99년 제1호, 송경남의 논문, “자립적 민족경제는 가장 효율적인 경제”에서였다. 송경남은 자신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중시하고 실제적인 리익이 나게 하는 것은 오늘 자립경제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원래 자립적 민족경제는 가장 효율적인 경제이지만 그 우월성은 결코 저절로 발양되지 않는다. 오직 실리를 중시하는 사업태도를 가지고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실제적인 리익이 나게 풀어나갈 때 그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게 된다…(중략)… 이러한 조건에서 주관과 욕망만 앞세우지 말고 나라의 구체적인 경제형편에 맞게 경제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계획화사업과 자재보장사업 등 경제사업의 모든 고리들에서 지난날의 기준에 구애됨이 없이 나라의 경제생활이 어려운 오늘의 조건에 맞게 모든 사업을 실제적인 리익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조직하고 전개하여야 한다(19쪽).

송경호의 주장의 요지는 이제 ‘경제관리(계획)의 합리화’의 전모(全貌)가 나타나고 곧 실행될 예정이니, 이전의 체제의 기준에 구애받지 말고 모든 경제사업을 실질적인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조직하고 실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북한 경제사업에서 연

합기업소체제를 관철시키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쉽게 바뀌지 않는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였다. 북한은 연합기업소체제를 1986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으나 사람들의 의식과 경제행위를 지배하는 문화는 신속하게 새로운 체제에 맞게 변하지 않았다.

북한은 상황에 맞게 제도를 바꾸어가면서 점증적인 이행을 추구하면서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마침내 새로운 체제에 부합하는 제도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이었다. 송경호의 논문 이후 ‘실리’는 『경제연구』에 실린 논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되었는데 실리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단어가 있었다. 바로 ‘선군’이었다. 리중서는 자신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지난해 주체 88(1999)년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난 력사의 해였다. 최근 몇 해 동안 우리 인민은 류레없는 시련의 언덕을 넘어왔다. 우리가 벌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사전이였다. 지난해 우리 인민은 불굴의 투쟁을 벌려 여러 해째 계속된 어려운 행군을 구보행군으로 전환시켜놓았다. ... (중략) ...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령도는 선군정치이다. ... (중략) ... 올해 주체 89(2000)년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루어나가는 총진격의 해이다. ... (중략) ... 경제일군들은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은 강성대국건설의 3대기둥이다. ... (중략) ...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보장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관리에서 경제적 효과성을 타산하여 실리주의적 원칙에서 리익이 큰 부문부터 틀어쥐고 하나씩 추켜세우는

방법으로 인민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여야 한다.⁷⁴⁾

리종서는 1999년 ‘고난의 행군’이 가장 어려운 시기는 끝났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조선중앙년감 1999』에서 밝힌 것과 같이 국가예산 수입총액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1998년 미약하지만 전년도에 비해 플러스 성장(조선중앙년감에 의하면 1998년 이후 북한은 연속으로 플러스 성장을 하였다)을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리종서는 ‘선군정치’가 김정일이 북한을 영도할(지도할) 방침이라면서 그 영도의 방향은 ‘강성대국건설’이고 사상과 군대 그리고 과학기술을 강성대국건설의 3대 축이며 경제사업에서는 철저히 실리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리종서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선군정치’, ‘강성대국건설’ 그리고 ‘실리’는 각각 다른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전제조건이며 실현의 수단과 방식이 된다. 즉 ‘선군정치’를 통해 ‘실리’를 관철시키며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선군정치’는 일반적으로 북한이 절체절명(絶體絶命)의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모든 역량을 군에 집중하여 체제 수호의 목적으로 나왔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선군정치’가 북한의 공식 문헌에 등장한 것은 1998년부터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북한의 경제는 1998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멈추고 미미하지만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북한은 1999년을 마무리하면서 공식적으로 ‘고난의 행군’이 ‘구보의 행군’으로 바뀌었음을 선언하였다. 『조선중앙년감』, 『근로자』, 『경제연구』 등 북한의 공식 문헌들도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북

74) 리종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 경제정책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전투적 기치,” 2~3쪽.

한의 경제 사정은 1999년을 분기점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는 지났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의 공식 문헌이 모든 거짓이 아니라면 ‘선군정치’의 배경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선군정치’를 통해 ‘실리’를 관철시키며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나?

4. 나가면서: 선군정치와 실리의 공존

북한은 사상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 중 하나만을 강조하고 절대화시키며 양극단을 달린 소련과 중국과는 달리 북한은 경제발전 목표와 사상적 목표 중 어느 것도 절대화하지 않았지만, 인간의 의식과 사상적 목표를 우위에 두고 여기에 물질적 조건과 경제 발전 목표를 결합시키며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추구하였다. 북한 지도부에게 과도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 제도와 개인의 의식 사이의 모순, 즉 집단주의적인 사회 제도와 개인주의적인 의식과 그것이 반영된 생활 태도의 모순이었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과도기의 핵심적인 과제는 집단주의적 사회 제도에 부합되게 개인의 의식과 행위를 공산주의적으로, 집단주의적으로 변화시키는 것⁷⁵⁾이 되는 독특한 과도기론을 가지고 경제 건설을 하여왔다. 이러한 북한의 과도기론은 실천적으로 정책화 되어 현실에 적용되면서 북한 경제의 내용과 구조를 이루는 근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분석되었듯이 북한의 과도기에 대한 이러한 해석과 입장은 경제 건설에서 비록 실행착오를 겪기는 하였지만

75) 김일성,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1958.11.20), 『김일성전집 22』, 491쪽.

견지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왔다.

북한의 경제위기는 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에서 촉발되어 1994년에 이르러 심화·악화되는데 북한은 경제 공간을 활용한 경제관리의 합리화를 핵심으로 하는 연합기업소체제를 가지고 대처하게 되었다. 연합기업소체제는 이미 1986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북한은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경제관리의 합리화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경제관리의 합리화 조치인 연합기업소체제가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더욱 심화·발전되었던 것이다. 연합기업소체제 안에서 시장은 북한에서 자원배분의 중요한 기제가 되었으며 경제위기로 더욱 탄력을 받아, 북한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북한의 지방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방의 소비재 수요를 그 지방의 유희자원과 내비를 동원하여 스스로의 생산으로 충족하는 체제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지방의 소비재 생산을 담당하는 공장·기업소들은 그 성격상 계획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원래부터 비계획 부문이었다. 연합기업소체제가 도입되고 지방의 자급자족적 생산체계는 더욱 강조되고 요구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시장적 성격과 요소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국가가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한층 더 탄력을 받아 심화 확산되었다. 그리고 한편에서 북한은 국가납부체제를 ‘변수입지표’체제로 바꾸면서 마침내 경제관리(계획)의 합리화체제의 틀을 완성하였다.

종합하여 보면 북한은 경제 공간의 활용을 통한 경제관리의 합리화 즉 계획의 합리화를 경제위기가 오기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시키고 있었으며 시장은 북한 경제 자원배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경제위기는 이러한 북한의 경제관리 합리화 안에서 추동되었던 경제 분권화를 더욱 가속시켰다. 이것은 공산주의 이행을 위해 확보하고 도달하여야 할 사상적 목표(사상적 요새)와 경제적 목표(물질적 요새)

중 경제적 목표가 우선시되는 것이었으며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 심각한 양상⁷⁶⁾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은 정무원을 경제사령탑으로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정무원에 집중시키고 정무원의 주관하에 풀어가며 모든 경제사업을 정무원의 통일적인 지휘와 통제 밑에서 진행하여 경제에서 규율과 질서를 세우려고 하였다. 경제를 정무원책임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김정일의 제가를 받은 당의 공식정책이었으나 현실에서 잘 수행되지 않고 있었다. 공장·기업소들과 사람들은 경제분권화가 10년 넘게 지속되면서 시장이라는 제도(institution)에 길들여져 있었으며 당 조직들도 중요하고 있었다.⁷⁷⁾

76) ‘혁명적 경제전략’ 아래 연합기업소체제와 경제 분권화가 심화되면서 자원배분에서 시장의 역할이 증대하자 기관본위주의, 즉 이기주의 그리고 자유주의가 확산되었던 것을 홍성남의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관본위주의는 개인주의의 변종으로서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기관본위주의가 허용되고 자라나면 일정한 기관의 이익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으로 비사회주의요소를 부식시키는 온상으로, 사회주의경제제도를 좀 먹는 위험한 독소로 되게 된다… (중략)… 특히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특수성을 내세우면서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정무원에 집중시키고 정무원의 결론과 지시에 따라 집행해나가지 않는 현상을 당을 기만하고 나라의 경제적 진지를 약화시키는 현상으로 보고 강한 투쟁을 벌여야 하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설비와 자재, 수송, 건설 문제를 비롯하여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정무원에 집중시키고 정무원의 주관하에 풀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사업에 대한 정무원의 통일적인 지휘와 통제를 강화하고 나라의 인적, 물질 자원을 경제전략수행에 최대한 동원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홍성남, “정무원책임제, 정무원중심제를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근로자』, 제7호(1996), 68~69쪽].

77) 이것은 김선의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악과 통제는 당적지도를 실현하는 기본형식이며 당조직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다. … (중략)… 가르쳐주고 도와주어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지도인 것만큼 장악과 통제가 없이는 도대체 지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 당정책을 틀어쥐고 그 집행을 장악지도되도록 하는 것이 당적 지도이며 정책적 지도

북한으로서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경제위기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도 ‘경제적 목표’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허용, 용인 한다며 북한의 과도기론도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과 같은 일이며 북한이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분석하여 볼 때 북한이 ‘선군정치’를 ‘실리’와 같은 시기에 갖고 나온 배경은 선군정치를 사상적 목표의 내용으로 삼고 선군정치의 지도를 통해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다시 과도기론으로 돌아가서(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사상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 중 어느 것도 절대시하지 않지만 다시 사상적 목표를 우위에 두고 그것을 경제적 목표의 지도 방침으로 삼아 경제 건설을 추구하겠다는 것⁷⁸⁾이었다. 북한은 이것을 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시킨다.

이다. 당조직들은 당정책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도 걱정만 하면서 속수무책으로 있어서는 않된다. 당조직들이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당의 경제정책이 무조건 그대로 집행되도록 철저히 장악통제하고 지도하면서 강하게 투쟁하여야 경제문제와 인민생활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김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추켜세우는 것은 당조직들 앞에 나서는 책임적인 사업,” 『근로자』, 제8호(1997), 27쪽).

78) 김동남의 다음 글은 이를 확인시켜준다.

“선군정치는 혁명군대를 단순히 무장한 집단으로만이 아니라 혁명의 기둥, 핵심력량으로 보는 주체적 관점에 기초하여 우선적으로 군대를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혁명과 건설 전반을 밀고 나가는 특이한 정치방식이다.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군대의 강화를 통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위를 보장하고 인민대중의 창조적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정치방식이다 … (중략) … 선군정치는 혁명군대를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키우고 그에 기초하여 전민을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정치방식이다. … (중략) …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과정에 혁명적군인정신이 창조되고 그것이 전체 인민들 속에 일반화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는 일대 비약의 나라를 달아 주는 강계정신이 나오고 성강의 봉화, 락원의 봉화가 온 나라에 타오르게 되었다. 이것은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을 힘차게 벌려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추동력으로 되었다”

1998년 개정 헌법은 주석제를 폐지시키고 국방위원회를 국가최고 통치 기관 격(格)으로 강화시키고 내각을 부활시켰다. 국방위원회가 최고 통치 기관이 아니라 최고 통치 기관 격이 되는 것은 국방위원회가 주석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신문』은 북한의 국가체제를 “국방위원회가 나라의 모든 정치, 군사, 경제적 역량을 통솔, 지휘하는 가장 혁명적인 정치체제”⁷⁹⁾라고 설명하였는데 국방위원회의가 북한의 모든 부문을 통솔, 지휘하는 방식은 모든 정책과 행정에 직접 관여하여 집행하는 행정적 방식이 아니라 1998년 개정헌법 제60조⁸⁰⁾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정치적 방식이었다.

개정헌법 제32조는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적지도, 국가의 통일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옹계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경제운영을 내각책임제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만연되었던 ‘경제적 목표’의 우위에 둔 정책과 그에 따라 형성되어온 현실에 대한 시정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였다.

1998년 개정헌법이 던지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체제를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편하였는데 국방

(김동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선군정치는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결정적 담보,” 『경제연구』, 제3호(2001), 2~3쪽).

79) 『노동신문』, 1999년 9월 5일자 사설.

80)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편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근로자』, 제10호(1998), 26쪽).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과 임무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사상을 우위에 두고(또는 사상적으로) 통솔, 지휘하는 것이며 경제는 내각책임제로 운영하여 경제에서 (북한 과도기론에 기초한) 규율과 질서를 다시 잡겠다는 것이었다.

내각은 국방위원회의 정치사상적 지도를 받기 때문에 경제를 내각책임제로 운영한다는 것이 정치와 경제가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갖고 운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것은 마치 국가운영체제에 ‘대안의 사업체계’를 도입한 것과 흡사하다. 즉 공장·기업소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하에서 당 비서는 당 사업을 담당하고 지배인은 행정 기술 사업을 담당하는 대안의 사업체계와 같이 국방위원회의 (정치사상적) 지도하에 내각이 국가의 모든 경제사업을 담당하고 책임진다는 것이다. 이렇듯 다시 사상에 우위를 두고 경제를 꾸려가겠다는 것이 선군정치와 실리가 동시에 등장하게 된 배경이었다.

■ 접수: 9월 4일 / 수정: 11월 18일 / 채택: 11월 27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 김일성, 『김일성전집 1~8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2009).
_____, 『1994년 신년사』(단행본)(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_____,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조선중앙년감 1994년~2002년』(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5~2003).

2) 논문

- 강기철, “우리나라 도매가격의 우월성,” 『경제연구』, 제4호(1995).
강련숙, “군농업연합기업소 재정의 특성,” 『경제연구』, 제1호(1995).
강영원,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켜 우리 식 사회주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 중요담보,” 『경제연구』, 제3호(1994).
고재환, “화폐유통을 공고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 『경제연구』, 제1호(1991).
김동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선군정치는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결정적 담보,” 『경제연구』, 제3호(2001).
김상학,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과 축적과 소비사이의 균형,” 『경제연구』, 제4호(1989).
김 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추켜세우는 것은 당조직들 앞에 나서는 책임적인 사업,” 『근로자』, 제8호(1997).
김원국, “사회주의상업기업소 독립채산제의 특성,” 『경제연구』, 제1호(1990).
김응교, “사회주의근로자들의 소비생활을 위한 원천과 그 동원리용문제,” 『경제연구』, 제1호(1997).
김일성,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1958.11.20), 『김일성전집 22』.
김재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는 것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과업,” 『근로자』, 제2호(1987).

- 김재현, “도시경영부문에서 점수제에 의한 생활비분배방법,” 『경제연구』, 제1호(1990).
- 김향란,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소유로 넘기는 형태와 방법,” 『경제연구』, 제2호(1995).
- 람세훈, “2중독립채산제는 농업연합기업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방법,” 『경제연구』, 제3호(1997).
- 류길선, “기업관리에서 가격공간의 합리적 리용,” 『경제연구』, 제3호(1994).
- 류영철, “2중독립채산제는 연합기업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방법,” 『경제연구』, 제4호(1993).
- 리동구, “가격의 일원화와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2호(1988).
- 리상철, “대안의 사업체계 관철과 연합기업소,” 『근로자』, 제7호(1986).
- 리신희,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특성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 제4호(1992).
- 리영근, “기업소경영활동에서 번수입을 늘이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제1호(2003).
- 리종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적 경제정책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전투적 기치,” 『경제연구』, 제1호(2000).
- 리종수, “사회주의 건설의 새 임무와 직맹 단체의 교양적 역할,” 『근로자』, 제1호(1962).
- 리춘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밝히신 지방무역의 본질적 특징,” 『경제연구』, 제3호(1997).
- 박경옥, “리운보위를 배격하고 경제관리에 가치법칙을 옳게 리용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제2호(1996).
- 박재영, “물질적 자극문제 해결의 원칙적 요구와 기본고리에 대한 주체적 해명,” 『경제연구』, 제2호(1990).
- 서권혁, “지방예산제와 군의 역할,” 『근로자』, 제6호(1997).
- 서승환, “사회주의적 로동보수제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로동활동을 추동하는 중요공간,” 『경제연구』, 제2호(1990).
- _____, “경공업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는 것은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 나서는 중요한 전략적사업,” 『경제연구』, 제2호(2004).
- 서재영, “소유형태에서의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성과적으로 극복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빛나는 승리,” 『경제연구』, 제2호(1994).
- 신동식, “사회주의사회에서 농산물수매의 본질과 특징,” 『경제연구』, 제2호(1993).
- _____, “사회주의사회에서 수매류통이 있게 되는 조건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 『경제연구』, 제2호(1995).
- 안윤옥, “기업관리의 합리화에서 계약 관계가 노는 역할,” 『경제연구』, 제2호(1993).
- 안현진, “연합기업소의 생산기술적 구조와 생산정상화,” 『경제연구』, 제2호(1992).
- 오선희, “지방예산편성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2호(2002).
- 유시영, “연합기업소는 우리 식의 새로운 기업소조직형태,” 『경제연구』, 제1호(1987).
- 위순형, “사회주의상업발전의 합법칙성,” 『경제연구』, 제2호(1989).
- 장상준, “사회주의사회에서 가격균형설정의 근본요구,” 『경제연구』, 제1호(1996).
- 장성은, “공장, 기업소에서 변수입의 본질과 그 분배에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 『경제연구』, 제2호(2002).
- 전룡삼,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단위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것은 소유전환을 가장 순조롭게 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 『경제연구』, 제1호(1998).
- 정광수, “등가성의 법칙은 교환일반의 경제법칙,” 『경제연구』, 1995년 제3호
- 조명철, “가치법칙과 등가성의 법칙과의 관계문제에 대한 연구,” 『경제연구』, 제1호(1994).
- 주호준, “농업연합기업소는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는 합리적인 형태,” 『경제연구』, 제4호(1994).
- 최영옥, “계약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자재공급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제2호(1988).

최원철,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고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 것은 기업관리개선의 기본담보,” 『경제연구』, 제4호(1989).

편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근로자』, 제10호(1998).

한득보, “원료, 자재의 합리적 리용에 작용하는 중요지표들과 경제적 공간,” 『경제연구』, 제1호(1987).

현명한, “류동자금의 리용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4호(1989).

홍성남, “정무원책임제, 정무원중심제를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근로자』, 제7호(1996).

황경직, “사회급양망들에서 원자재를 자체로 생산보장하는 것은 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제1호(1994).

3) 기타 자료

『로동신문』, 1999년 9월 5일자 사설.

Re-interpretation of North Korean Economy (based on *Keunloja* and *Kyungajaeyeongoo*) - part II

Phillip H. Park(Kyungnam University)

This is second part of “Re-Interpretation of North Korean Econom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s version of economic reform started not in July 1st 2002, known as ‘7·1. (economic reform) Measure’, but ever since North Korea adopted full-scale *Yeonhapkiupso*(Industrial Combined Complex) system in 1986. Second, through a trail-error process, *Yeonhapkiupso* system institutionalized in North Korea and because of thi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ystem, North Korea was able to cope with the economic crisis which started in 1992 when the Soviet Union collapsed and the socialist economic bloc was disintegrated. Utilization of market, one of the key features of the system, expanded and deepened during the crisis; nonetheless, it is important to be noted that it was not spontaneous marketization from the bottom, but controlled and guided marketization from the above. Third, although it was controlled and guided marketization from

the above, economic means became more important than socialist ideology as market played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In order to adjust this kind of ideological tilting toward right, North Korean authority implemented ‘Military First Politics(선군정치)’ while emphasizing distribution according to one’s actual/real contribution/work(실리).

Keywords: *Kyungjaeyeongoo*, *Yeonhapkiupso*, Contract System, decentralization, Revolutionary Economic Strategy, Sungun, Shili, 7·1 Measure